



주간통일정세 2008-29(2008.07.14 ~ 07.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2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러시아 무용공연 관람(7/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베료즈카 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무용단의 미라 콜조바 단장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임시대리대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북한 정권수립 60주년을 기념한 무용단의 방북 공연에 사의를 포함.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7월 11일 제280군부대 시찰 소식 후 엿새만임.

### 나. 정치 관련

- **北, 李대통령 연설에 새 제안 없다(7/20,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7월 11일 국회 시정 연설은 “반통일적 입장과 대결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북핵 해결이 선결 과제”라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에 추종해 ‘핵문제 우선론’을 내들고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북남관계가 최악의 지경에 처했는데도” 같은 말을 다시 했으며 이는 “‘비핵·개방·3000’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결국 ‘대화 재개’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빈말로서, 대결적이며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에서 달라진 것이란 하나도 없다”며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北, 주민들에 ‘정신력 극대화’ 주문(7/18; 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오늘의 총진군은 사상의 총진군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부강조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이룩해 나가는 사상의 총진군이라는 데 오늘의 총진군의 근본 특징이 있다”고 강조
  -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짓부셔 버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원칙과 입장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금성 철벽”이라고 주장



- 15일 노동신문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체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나가는 오늘 사상 사업에서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 北, ‘금강산 피살’ 대내용 보도 없어(7/14, 연합)

-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 대변인의 담화를 사건 발생 하루만인 12일 오후 7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내보냄. 이어 오후 8시 15분과 오후 10시 대남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두 차례 반복했을 뿐 북한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는 14일 오전 현재까지 다루지 않고 있음.

● 조선신보, 6·15선언 외면하는 한 대북제안 불통(7/14, 조선신보)

-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표명을 (남북) 대화재개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선언의 이행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은 언제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4일 주장

다. 경제 관련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대형산소분리기 본격가동(7/20, 조선중앙방송)

● 北 내각, ‘국경무역 관리규정’ 채택(7/18,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은 최근 ‘국경교두(국경다리) 종합무역장 관리운영 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민주조선이 18일 보도, 신문은 “규정에는 국경교두 종합무역장의 사명과 관리·운영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규정의 적용대상 등이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신문은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경교두를 통한 대외경제 사업에서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국경교두 종합무역장 관리·운영 사업을 끊임 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 네덜란드 기업투자단, 9월 방북 北과 합의(7/18, 자유아시아방송)

- 네덜란드 ‘시장개척 사업단’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4일까지 북한을 방문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네덜란드는 최근 북핵 문제나 정치적 긴장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네덜란드 기업들의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올해



초부터 민간 자문회사인 지아이피(GIP) 컨설턴시, 네덜란드 무역촉진 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장개척 사업단의 방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

- **北, 발명·특허 활성화, 생산 정상화에 기여(7/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최근 발명과 특허기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생산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올해 들어와 과학자 기술자들 전국 각지의 일꾼(간부)들과 근로자들이 발명사업을 힘있게 벌여 가치있는 발명 및 특허기술을 수많은 내놓음으로써 공장기업소의 기술개선과 생산 운영의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발명·특허 기술의 개발 실적을 구체적 수치로 밝히지는 않음.
  
- **北주민, 3분의2 하루 두끼 식사(7/17, 세계식량계획(WFP))**

  - 북한 주민 약 3분의 2가 식량난으로 하루 두끼 식사를 하고 있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의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WFP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사자가 속출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근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 **北주재 서방외교관, 대규모 기근징후 없어(7/16, 자유아시아방송)**

  - 현재 북한에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기근 징후는 없으며 한국의 일부 대북 지원 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 경고는 과장된 것이라고 “북한에 상주하는 서방국가 고위 외교관”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최신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언급
  - 그는 “평양 상주 외교관들 사이에 회람된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경사면을 깎아 경작지로 만들어 식량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다, 시장을 통해 식량의 절반 가까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 “그러나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는 식량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 **北상원세멘트, 상반기 계획 완수(7/15, 조선중앙방송)**

  - 이집트의 오라스콤그룹 계열사가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상반기 생산 계획을 완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오라스콤은 2007년 7월 상원기업소의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1천5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그후 시멘트 계열사를 프랑스 건설회사에 모두 팔면서 관련 분야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라스콤 계열사를 인수한 프랑스 회사가 북한의 시멘트 사업에 계속 투자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조선신보, 北 함경북도까지 키위 재배(7/14, 조선신보)**
  - 북한에서 '왕다래'로 불리는 키위가 개성과 평양은 물론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여러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14일 보도
- **北, 주변국서 평양된장 합작 요청(7/12, 통일신보)**
  - 평양 대동강식료품공장에서 만든 '평양매주장'이 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변국에서도 적극적인 교류와 합작을 요청하고 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 라. 군사 관련

- **북, 립팍-을지군사연습 연일 비난(7/20, 통일신보: 7/20, 우리민족끼리; 7/19, 노동신문)**
  - 통일신보는 20일 미국 주도의 '립팍' 군사훈련과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해 "이러한 군사적 책동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포"라며 "우리 공화국은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같이 준비돼 있다"고 반발
  -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통일신보는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불장난 소동'이라는 글에서 "최근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북침 전쟁 준비소동이 도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 19일 '립팍 합동군사연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글에서 "립팍 연습은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타격을 노린 불장난 소동"이라며 이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미국, 일본과 '3각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려는 야망의 발로"이자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
- **北, 한미UFG연습에 자위적 조치 단호 대처(7/18,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8일 대변인담화를 통해 8월 실시될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우리(北)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포"라며 "강위력한 자위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군사적 대결 속에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공고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한미가 거론하는 "대화'와 '평화', '관계개선'이란 빈말에 불과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 뿐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北, 항모 레이건호 입항 "북침책동" 비난(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호의 부산항 입항을 "북침 선제타격 기도"



라고 비난, 통신은 군사소식통을 인용, “미제 침략군 호전광이 남조선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기동·전개시키고 있다”며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기어든 데 이어 17일에는 유도탄구축함 맥캠프벨호가 평택항에 닿을 내렸다”고 주장

\*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국 해군과 친선교류 및 승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지난 14일 부산항에 입항

- **北, 국방력 강해야 배짱대로 해(2008년 2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08년 2호)는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하고 그 위력을 강화해야 나라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며 군사력 강화 당위론을 주장, 김창경 부교수(박사)는 17일 ‘강력한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의 상징이며 부강번영의 근본담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빛내나가려 해도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고 강조
- **北, 샤프사령관 ‘폭동·반란전술’ 발언 비난(7/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도발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북한이 이라크 현지 무장세력의 폭동 및 반란 전술을 한미연합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을 “망발”이라며 “매우 불손하고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 노동신문은 “풍부한 전투경험과...현대적인 공격 및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을 이라크의 비정규적인 무장세력에 비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샤프 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우리를 걸고 남조선에 현대적인 공격수단들을 끌어들이어 제 2의 조선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
- **北,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구 주장(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3각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냉전시대 “북남대결의 과거를 되살리는 범죄적 행위”라고 비난, 신문은 한·미·일간 “3국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 등은 3각 군사동맹이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일·남조선의 군사행동”이라고 주장
- **北, 美 미사일방어체제 비난(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은 평화와 군축의 흐름에 역행해 핵위협, 무력증강 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음. 신문은 ‘군비경쟁의 장본인은 규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여기(MD)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생산, 배비(배치)를 다그치고 있다”



면서 “미제의 핵무력 증강, 군비확장 정책에 의해 세계에서는 새로운 군비경쟁, 핵 대결의 위험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세는 더욱 긴장해지고 있다”고 주장

#### 마. 사회·문화 관련

#####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홍콩서 공연(7/20, 평양방송)

- 북한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의 홍콩종합 대학회관과 예술학원극장, 홍콩문화센터 등에서 공연했다고 평양 방송이 20일 보도

##### ● 조선중앙TV, 태풍경보 발령(7/20,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0일부터 북한 지역도 제 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19일 예보하고 경제부문의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아울러 “7월 하순에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강냉이(옥수수) 농사에서 장마철 습해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 北, 임진왜란 의병장 이정암 묘 발견(7/19, 조선신보)

-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개성에서 임진왜란 당시 연안성 전투의 지휘자인 의병장 이정암(1541-1600)의 묘를 찾아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 FIFA, 평양서 北 감독 대상 첫 강습회(7/19, 조선신보)

- 국제축구연맹(FIFA)이 7월 3일부터 평양에서 북한 남녀 감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그동안 아시아 축구연맹(AFC)은 매년 한 두 차례씩 평양에서 감독과 심판 등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해 왔으나 FIFA가 북한에서 강습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강습회는 2008년 상반기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대표단의 스위스 방문 때 FIFA 측과 합의한 교류계획에 따른 것임. 8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강습에는 평양시, 리명수, 월미도, 기관차체육단 등 각급 체육단의 남녀 감독 3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FIFA가 추천한 스위스인 앤디 에글리씨가 강의를 맡고 있음.

##### ● 北전화번호부에 휴대전화·컴퓨터통신 신청 양식(7/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북한 당국이 일반전화 이외에 휴대전화와 컴퓨터통신의 개설 신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8일 보도  
-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양식을 추가한 것으로 보임. 전화번호부에는 노동당과 행정부처 등 각 기관의 조직이 평양을 비롯해 12개 도시별로 상세히 수록돼 있으나 주소는 병기되지 않았으며, 국가안전



보위부 등 국가기밀관련 기관은 생략돼 있거나 일부만 소개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설명

● **평양 주요거리 아스팔트 재포장(7/17, 조선신보)**

- 북한이 최근 석달 남짓한 기간 평양 중심가 도로 90만㎡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신문은 이번 공사로 모란봉, 비파, 영웅, 봉화, 북새강안, 개선문, 룡남산 거리 등 평양시내 여러 거리가 새롭게 단장됐다면서 현재 도로 주변의 건물 보수, 녹지와 가로수 정리, 경계석 보수 및 설치가 한창이라고 소개
- 신문은 특히 평양 중심가인 보통강, 모란봉, 중구역에선 여러 가지 색과 문양의 보도블록이 깔렸다면 “현재까지 23만여㎡의 걸음길(인도) 보수, 60여만㎡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외장재 바르기, 9만8천여㎡의 녹지가 정리됐다”고 전언

● **큰물에 혼난 北, 장마맞아 예방에 총력(7/16, 조선신보)**

- 장마철을 맞아 중앙기관은 물론 각 시·도·군 전역에 홍수피해 예방지휘부를 설립하고 24시간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조선신보는 올해 장마철이 평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북한은 홍수방지를 위해 지난달 내각에 ‘큰물피해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전력공업, 석탄공업, 농업, 국토환경보호 등 각 성과 중앙기관을 망라한 ‘큰물피해방지연합지휘부’를 설립했다고 보도
- 각 도·시·군 차원에서도 ‘큰물피해지휘부’를 조직하고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 지난해 홍수 피해지가운데 미복구 대상의 복구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움. 또한 내각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기상수문국과의 긴밀한 연계아래 일(日)·주(週) 단위 기상자료를 통보받아 신속히 전파하고 해당 성·중앙기관들이 시멘트, 강재, 목재 등을 비롯한 수해방지 물자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소개

● **北도 무더위, 수영장 연일 초만원(7/16, 조선신보)**

- 북한에서도 무더위를 맞아 각지의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이 “연일 초만원”이라고 조선신보가 16일 소개

● **北, 대동강 홍수예방 ‘비상체제’ 돌입(7/15, 평양방송)**

- 2007년 대동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경험했던 북한의 ‘대동강큰물(홍수)지휘부’가 올해에는 일찌감치 폭우 피해방지 비상체제에 돌입

● **北, 외국어교육 아이디어 짜내기(6/26, 교육신문)**

- 북한 대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교육신문은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의 외국어 교육방법 “혁신” 사례를 자세히 소개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北박의춘, 싱가포르 향발(7/19,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례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 연단 상(相)회의(아세안 연례 외교장관 회의)와 이란에서 열리는 벨릭불가담나라(비동맹국) 외무상 회의에 참가할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북한)대표단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또 북한 대표단이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도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 김 숙, 금강산피살과 6자회담은 별개(7/17,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금강산 피살’ 사건과 관련,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그는 “북핵 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니 쉽게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 北검증 작업, 美 적대포기와 진도맞출 것(7/15, 연합)

- 북한이 이미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 진도를 보아가며 병행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조선신보는 6월 10~12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한 결산기사에서 “2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조선(북한)의 공약은 무력화(북능화)와 핵 신고”인데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가 발효되지 않았고 5자의 경제적 보상조치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10·3합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검증 작업에 솔선 나서야 할 까닭이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

### 나. 북·중 관계

#### ● 中, 금강산 피살사건 불개입 시사(7/17, 연합)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현장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해 이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침. 류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남북 양측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힘.



● 北, 中 봉제설비 생산기업과 합작 추진(7/15, 연합)

- 15일 중국 최대의 공업용 미싱생산업체인 중제(中捷)미싱사 웹사이트 김철민 조선방직복장협회 베이징(北京)대표처 수석대표는 7월 10일 이 회사를 방문해 공업용 미싱기 구입 및 합작생산 문제를 논의

다. 북·러 관계

● 北·러, 나진항 컨 터미널 건설위한 합작회사 설립(7/17, 연합)

-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 17일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RZD 무역회사에 따르면 RZD와 북한의 나진항이 각각 70%와 30%의 지분으로 설립한 이 합작 회사는 향후 49년간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등록되며, 나진항에 40만TEU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
- \* 지난 4월 24일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연장 54km의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

라. 북·일 관계

● 北단체, 日 ‘독도 도발’ 南정부 싸잡아 비난(7/19,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7/19, 우리민족끼리; 7/18,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19일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이명박 정부와 연계해 비난
- 조국전선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변인은 일본의 행보를 “노골적인 독도강탈책동”으로 규정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힘. 또 “독도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 반동들의 역사 왜곡과 독도 강탈책동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재침의 전주곡으로서 앞으로 들이닥칠 침략의 광풍을 예고해 주고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고 도발적인 망동”은 “바로 이명박 패당의 친일사대 매국책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독도문제와 이명박 정부를 연계시켜 강도 높게 비난
-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해설서에 들어있는 독도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역할을 교육하도록 한 대목만 문제 삼아 일본의 “재침책동”을 비난
- 19일 ‘우리민족끼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



### 3. 대남정세

#### ● 정부, 對北 물자제공 잠정 보류(7/18, 연합)

- 정부는 금강산 피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군(軍) 통신선 개선을 위한 장비·자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내부 장비·비품 등 북한에 제공하려고 준비해온 물자들의 공급을 사건 해결 뒤로 미루기로 했음.
- 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사업 주체인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하는 방식으로 면회소 내부에 들어갈 장비·비품을 조달, 복송하기 위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41억원의 집행도 보류할 예정
- 정부는 이 외에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지원건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국민 정서를 감안,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 ARF서 ‘금강산 사건’ 공식 제기(7/18, 조선일보)

- 정부는 7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전체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능한 한 회담 결과물인 의장성명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 北 조사 거부땀 개성관광 중단 검토(7/18, 조선일보)

- 정부는 북한이 끝내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성관광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민주당 금강산 사건대책반 회의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

#### ● 금강산 협력사 직원 추가철수(7/17, 연합)

- 현대아산은 17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직전 1천350명이었던 현지 근무 직원 수가 이날 현재 1천10명까지 줄었다고 밝힘. 이는 7월 15일 현재 현지 직원이 1천70명까지 줄었던 데 이어 이틀간 60명이 더 빠진 것으로, 영업을 중단된 음식점과 상점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추가로 철수한 것이라고 현대아산측은 설명
- 한편 개성관광은 큰 타격이 없이 평소의 영업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도의 北 라면공장 건립 보류될 듯(7/17, 전라북도)**

  - 전북도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라면공장 건립사업이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군 및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북한 평양시 인근에 하루 최대 5만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통일부의 승인 문제와 북한 측의 밀가루 조달 능력 결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 전북도는 북한 측에 라면수프 제조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과 접촉했으나 업체들이 최근의 경기상황과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기술 이전을 꺼려 더욱 난감한 상황임.
  
- **김의장,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제안(7/17, 연합)**

  -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지난 90년 이래 중단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다”며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 60주년 경축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공 막혀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의장단이나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먼저 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개성공단 건물 골조 쓰러져…北인부 사망(7/17, 연합)**

  - 개성공단 내에서 건축중이던 건물의 골조가 쓰러져 북한 인부 한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침.
  - 17일 개성공단지원단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께 개성공단내에 건축 공사중이던 섬유업체 평안주의 제2공장 건물 골조가 옆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인부 중 한명이 숨지고 4명(중상 2, 경상 2)이 다쳐 개성 내 병원으로 옮겨짐.
  
- **피격사건 당일, 금강산 전화 2시간 차단(7/17, 연합)**

  -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당시 현대아산이 금강산 현지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국제전화 회선을 2시간 가량 끊었던 것으로 밝혀짐. 현대아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앰블런스가 금강산 특구 내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등 부정확한 소문이 나돌아 박씨의 시신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까지만 일시 전화를 차단했다”고 주장
  
- **李대통령, 금강산 피격사건 말할수없는 슬픔(7/16,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희생자가) 가정 주부이기도 한 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언급,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성계 인사 약 200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언급



●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문답(7/16, 연합)**

-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은 16일 계동 현대사옥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북측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남측의 시각과 정서, 심각한 여론을 전하고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한 점이 방북 성과로 생각된다”고 밝힘. 또 윤 사장은 “합동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해 현장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다시 방북할 계획”이라고 주장
- 윤 사장은 또 “북측은 이번 사건이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합의서 위반이라기보다는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 **포스코, 철광석 수입 협상차 또 방북(7/15, 연합)**

- 포스코가 북한 철광석 수입을 위해 실무자를 또다시 북한에 파견, 앞서 김동진 포스코차이나 사장은 6월 24일 북한의 대남 민간경제협력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철광석을 시험 구매 방안 등을 논의

● **정부 “3개 합의 위반” 대북통지문… 북(北), 수신 거부(7/15, 연합)**

- 정부는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진상 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대북(對北)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수신을 거부했다. 북한은 12일에도 우리측이 보내려던 통지문을 받지 않음.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통지문을) 받으라는 상부 위임이 없어서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했다”고 발표,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씨 사건이 ▲(남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한 금강산 등 체류 합의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 1998년 7월 북측 사회안전부장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1998년 6월 현대와 아태평화위 계약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금강산 현지 직원 265명 충격사건 이후 국내 귀환(7/15, 연합)**

- 현대아산은 15일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로 이날 오전까지 현지 협력업체 직원 등 265명이 국내로 돌아왔다고 15일 발표
- \* 현대아산에 따르면 사건 당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은 1천35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현재 1천70명이 남아 있으며 철수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수는 72개 회사임.

● **부산~금강산 관광열차 운행 잠정 중단(7/15, 연합)**

-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충격 사망사건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던 금강산 관광열차 운행도 잠정 중단, 15일 코레일 부산지사에



따르면 오는 30일 운행예정이던 '금강산 바캉스 특급열차'(예약인원 120명)와 8월2일 출발예정이던 관광열차(예약인원 250명)가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취소됨.

● **홍준표, 北에 '남북정치회담' 제안(7/14,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한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제의하고 "남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진상규명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 〈첨부1〉 ‘금강산 피살’ 대북통지문 [전문]

『우리측은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육안으로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저항의사가 없는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우리측에 통보없이 방치한 행위 역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이를 제지하고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상기 합의서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난 1998년 7월 9일 당시 북측 사회안전부장이 우리측에 보낸 신변 안전보장각서를 통해 우리측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배치된다.

그리고 1998년 6월 22일 현대와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체결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 제4조에는 “아태측은 북측 관할구역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 현대측 실무대표단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북측 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남북 당국간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와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게 맡겨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황부기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하며, 현지조사활동 과정에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 정보교환과 협력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07/15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라이스 “北, 완전비핵화 없으면 교역·경제지원 못얻어”(7/18)**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교역과 경제지원에 대한 문호개방, 정치적 인정이지만 완전히 비핵화 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손 해너티 라디오 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한 대가로 받는 혜택은 상징적이고 매우 적다 (very few)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가 전했다.
  -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불능화와 냉각탑 폭파를 언급,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핵장치를 만들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라이스 장관은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지만 (북미)양자간 뿐만아니라 다자간 다른 제재가 많이 있어서 이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 **中, ARF서 6자 외교장관회담 가능성 시사(7/17)**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제츠 외교부장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계획을 공개하면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부 당사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을 제의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회동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 **“北, 주한미군 핵보유 여부 검증 요구”<RFA>(7/17)**
  - 북한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핵에 대해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검증장치에 대해선 동의하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 방송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브리핑한 사정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6자회담이 끝난 뒤 언론발표문보다 격이 높은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것도 주한미군의 핵보유 검증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의견차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 **“美, 우라늄 검증 전에 北테러명단 삭제안해야”<美연구원>(7/17)**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16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비핵화 엄밀한 검증 필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전에 미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2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선언하면 안된다고 밝혔음.

-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6자회담 2단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데도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지지 전에는 6자 회담 2단계 의무사항 이행을 완수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 ● 페리 전美 국방 “경수로2기면 北 핵무기 포기할 듯”(7/17)

-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믿는다”며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과거 원했던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대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이라며 이같이 답변하고 북한의 비핵화 비용이 경수로 2기라면 매우 작은 양의 대가로 미국의 안보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힐, ARF서 비공식 6자장관급회담 가능성 시사(7/17)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싱가포르에서 이달 하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관련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비공식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협정문이 조만간 합의되고, 검증 프로세스도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힐 차관보는 “현재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힐 차관보는 그러면서 “장관급 회담이 될 지, 수석대표회담이 될 지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6자회담 관련 이벤트는 비공식 행사이며 공식 행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비공식 6자 장관급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음.

### ● 반 총장 “6자회담 진전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7/1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환영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을 촉구했음. 반 총장은 이날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약속의 이행을 점검할 장치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베이징 6자 회담의 성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음. 또 이번 진전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식한다면서 모든 관련당사국들이 이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추가 진전을 이루고 양자간 이슈들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대화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음.

● **美상원 16일 북핵신고 비공개 청문회(7/15)**

- 미 의회 소식통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조지프 바이든)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신고에 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날 청문회에는 북핵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이 증인으로 출석,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 및 향후 검증방안,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 검증 작업, 美 적대포기와 진도맞출 것” <조선신보>(7/15)**

- 조선신보는 지난 10~12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한 결산기사에서 “2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조선(북한)의 공약은 무력화(북능화)와 핵신고”인데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가 발효되지 않았고 5자의 경제적 보상조치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10.3합의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검증 작업에 솔선 나서야 할 까닭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6자회담이 끝난 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해제조치가 발효되는 시한인 8월 11일 전에 “검증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북한측이 ‘선의’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으나 “6자회담 틀거리 안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조미(북미) 양자간의 공통인식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번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것”을 주목되는 진전이라고 지적하고, 이 검증 체제는 미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신고서 검증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10.3합의 이행을 완결한 후의 제3단계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검증체제”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美상원 16일 북핵신고 비공개 청문회(7/15)**

- 미 의회 소식통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조지프 바이든)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신고에 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날 청문회에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이 증인으로 출석,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 및 향후 검증방안,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日외상, 북에 ‘6자 합의 기만 말라’ 경고(7/13)**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NHK 방송에서 “제재 조치는 해제될 수도 있고 다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내가 북한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것은 미국을 크게 얽잡아 보거나 욕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은 반면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고무라는 가장 최근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를 검증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엄밀한 토론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北-美장관회동, 부시의 對‘악의축’정책 진화”<WP>(7/19)**

- 오는 23일 열리는 ‘비공식 북핵 6자 장관 회동’에서 북-미 외무장관이 만나기로 한 것은 ‘악의 축’ 국가들을 다루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진화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의미를 부여했음. 포스트는 이날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비공식 6자 장관 회동’에 참석, 북한 박의춘 외무상을 만나기로 했다는 국무부 발표를 보도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美 인권단체, 中 수감 탈북지원활동가 석방 촉구(7/19)**

-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수감된 탈북자 지원활동가 4명 등 중국 내 수감자 23명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자유연합, 파룬궁의 친구들, 티베트계미국인연합, 중국구호협회, 오픈 도어즈 USA 등은 1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음.
- 단체들은 서한에서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수감자 23명의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음. 수감자에는 탈북자 지원활동가와 기독교인, 티베트족, 위구르족, 파룬궁 수련생 등이 포함돼 있음.

● **“라이스 싱가포르서 北외무상과 만날 예정”<미국무부>(7/19)**

- 손 매코맥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에 참석한다”며 “ARF를 계기로 비공식 6자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회담 참가국에 북한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매코맥 대변인은 비공식 6자회담 개최 배경과 관련, “외교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모임은 구체적 협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명서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장관들에게 6자 수석대표 회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하원, 행정부 6개월마다 북핵보고 의무 법률로 규정(7/18)**
  - 미국 하원은 미 행정부가 6개월마다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의 핵프로그램 진척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법률로 규정했음. 17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가결처리했음. 법안은 180일마다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의 핵프로그램 추진 의도와 능력 등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해 제출토록 의무화했음.
  -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법 발효 30일 이내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계사 살펴보면 對北제재는 ‘당근+채찍’이 효과적”(7/18)**
  -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가, 독재국가 등에 대해 경제제재를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1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제재가 성공한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원은 17일 펴낸 ‘경제제재 재고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라는 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대(對)북한정책도 채찍만 사용하는 것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음.
  - 연구진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과 관련, “지난 수십년 간 미국 홀로 추진한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의 제재도 큰 의미가 없었다”면서 “채찍 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했음.
  
- **라이스 내주 싱가포르 ARF 참석(7/18)**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일부터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사모아 등 중동 및 아·태지역을 순방함. 라이스 장관은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아세안 협력관계 및 북한 핵, 자유무역협정, 식량 및 에너지 관련 현안 등에 관해 회원국 각료들과 의견을 교환함.
  
- **오바마 “北 핵프로그램 포기 거부하면 강력 규제 직면”(7/17)**
  -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인디애나 퍼듀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테러를 지원한 역사가 있다”며 “두 나라는 그들의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력하고 그리고 더 큰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는 미국이 직면한 테러와 핵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핵비확산 노력을 강조하면서 “핵비확산 조약을 준수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 조약을 파기했던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美, 북한에 베트남식 개혁 유도해야”(7/17)

-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유에스에이투데이지에 실은 ‘북한을 위한 베트남 모델(Vietnam’s model for N.Korea)’이라는 기고에서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공산주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재건한 베트남이 북한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개혁된 북한은 오늘날 베트남과 같은 모습 일 것”이라고 비유했음.
- 북한에 핵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대폭 감축, 장기적인 인권 개선 등까지 요구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대북지원과 교역에 나서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음.

#### ● 北주재 서방외교관 “대규모 기근징후 없어”<RFA>(7/16)

- 현재 북한에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기근 징후는 없으며 한국의 일부 대북 지원 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 경고는 과장된 것이라고 “북한에 상주하는 서방국가 고위 외교관”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최신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평양 상주 외교관들 사이에 회람된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경사면을 깎아 경작지로 만들어 식량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다, 시장을 통해 식량의 절반 가까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 美 대북인권특사, 개성공단 방문 추진(7/16)

- 정부 소식통은 16일 “레프코위츠 특사가 오는 22~24일 방한하며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방북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서는 통상 4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의 방북신청은 이보다 훨씬 늦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이 나올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북한이 대북 강경발언으로 유명한 그의 방북을 수용할 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美CIA 前관리 “북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돼”(7/15)**

- 지난 25년간 CIA 요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2003~2005년 아시아 관련 비밀업무를 총괄했던 아트 브라운은 1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을 통해 북한의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촉구했음. 브라운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교적 성공에 목마른 미국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들간의 분열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브라운은 또 북한이 지난 2000년대 파키스탄의 우라늄농축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의혹과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올 가을 북·미 예술교류 풍성(7/15)**

-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16일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필의 평양 공연 당시 사진을 모은 전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0월께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헤더씨는 자신이 수집해 온 북한 선전포스터와 그림, 도자기 등을 선보이는 ‘북한 예술품 전시회’를 지난해 7월 영국 런던에서 가진 데 이어 올 하반기 뉴욕의 첼시미술관에서 열 계획
- 북한의 선전포스터 중에는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작품도 다수 포함돼 미국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 **美 “담배, 보석, 고급차, 알코올 등 對北수출 계속 불가”(7/14)**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폐지했지만 식량 및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들을 북한에 수출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미 상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교역지침 참고자료인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한 Q&A’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음.
- 지침은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알렸지만 45일 간의 통보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행정부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원칙과 협정에 합의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및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일부 수출통제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했음.
- 북한은 현재 EAR에서 규정한 국가그룹 중에서 D:1(국가안보 및 전래식 군사관련 수출통제국), D:2(핵관련 수출 통제국), D:3(화학및 생물학무기 통제국), D:4(미사일 관련 수출통제국) E:1(테러지원국 관련 수출통제국) 등에 속해 있지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



라도 E:1에서만 해제되고 D그룹에 속한 데 따른 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 상무부는 북한에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으로 담배, 손목시계, 의류 및 패션 물품, 양탄자, 보석, 예술품, 고급승용차, 요트, 세그웨이, 알코올, 악기 및 운동기구, i-pod와 같은 일부 전자제품 등을 적시했음.

#### 다. 중·북 관계

##### ● “中, 북한인들에 올림픽 중 출국 요청” <블룸버그>(7/16)

- 16일 블룸버그 뉴스가 입수한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의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무역대표와 정부과건 직원을 제외한 북한인들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중국을 떠나 9월말까지 되돌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음. 이에 따라 북한 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내 북한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훈령을 하달했음.
- 13일자로 발효된 이 훈령에 따르면 제때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중국 재입국이 금지됨. 또 7월1일 이후 예정됐던 북한인들의 중국 파견도 9월25일 이후로 미뤄짐.

##### ● “北, 中 봉제설비 생산기업과 합작 추진”(7/15)

- 15일 중국 최대의 공업용 미싱생산업체인 중제(中捷)미싱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철민 조선방직복장협회 베이징(北京)대표처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이 회사를 방문해 공업용 미싱기 구입 및 합작생산 문제를 논의했음. 중제미싱은 ‘ZOJE’라는 상표로 공업용 미싱기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봉제설비 생산업체로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임.
- 김 대표는 이 회사의 리루이위안(李瑞元) 이사장을 만나 공업용 고속 미싱기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이번 방문 목적은 중제미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시범 구입하고 향후 미싱기 합작생산에 대한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라. 일·북 관계

##### ● 日, 싱가포르서 북일 외무장관 접촉 타진(7/20)

- 2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ARF에 참석하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처음으로 열리게 될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개별 접촉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은 고무라 외상이 북한의 박 외무상과 개별 회담을 갖게 될 경우 납치문제 재조사의 조기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외무장관 수준에서는 실무적인 얘기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납치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北 사이트,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첫 비난(7/19)

-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처음으로 비난했음. 이 사이트는 ‘본격화되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영토, 영역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해를 향상시키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써넣기로 함으로써 2012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공식 표기되고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그것이 교육을 통해 정식 주입된다”며 “이것은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고 자주권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 日, 납치문제-北 에너지지원 연계 재확인(7/17)

-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6일 납치피해자 가족회 관계자들과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교도(共同)통신이 17일 보도.
- 이 자리에서 사이키 국장은 납치문제의 진전없이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6자회담 관계국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마. 러·북 관계

● 北·러, 나진항 컨 터미널 건설위한 합작회사 설립(7/17)

- 17일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RZD 무역회사에 따르면 RZD와 북한의 나진항이 각각 70%와 30%의 지분으로 설립한 이 합작 회사는 향후 49년간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등록되며, 나진항에 40만TEU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지난 4월 24일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연장 54km의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음.

바. 기타

● 네덜란드 기업투자단 9월 방북 北과 합의(7/18)

- 네덜란드 ‘시장개척 사업단’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을 방문키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의 카스 브라우어 공보관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방북단은 북한 투자에 관심있는 15개 기업으로 구성된다며, 방북 기간 통신, 통행, 통관 등 대북투자의 걸림돌인 3통문제를 직접 점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 파트너인 평양 상공회의소가



네덜란드 기업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북한내 담당자들과 ‘맞춤형 개별 면담’을 주선하고 공장을 견학시키는 것은 물론 “네덜란드 기업인의 최대 우려 사항”인 현지 연락망 및 통신망관련 회의도 열기로 합의 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브라우어 공보관은 말했다.

● **홍콩서 北 평양소년예술단 공연(7/15)**

- 홍콩 국제청소년합창제에 참가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은 이날 오후 홍콩의 대북 물류기업 동남해운과 홍콩 한인회 등의 주관으로 특별 초청 공연을 함. 7세부터 15세까지 40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들 예술단은 민요, 무용, 중창, 연주 등 17개 프로그램을 돌아가며 2시간여 동안 공연을 가졌음.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은 이에 앞서 14일 오후 홍콩 대에서도 홍콩 관중을 상대로 홍콩 가요를 비롯한 중창, 연주, 무용으로 구성된 공연을 가졌음.

●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경색 장기화 전망”<中언론>(7/14)**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양측간 긴장관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사건 이후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 하면서 이미 심각한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남북 경색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신문은 한국 정부가 북측에 남북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제안했으나 북한은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조사를 거절했다는 사실도 상세히 전했다.

● **유럽 탈북자 자전거 대행진, 런던서 마지막 시위(7/14)**

-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유럽 6개국 일주 자전거 대행진’ 행사단이 13일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 런던에서 탈북자 인권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음.
-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팀 피터스 헬핑 핸드 코리아 대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소속 회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런던 시내 관광명소인 피카딜리 서커스와 트라팔가 광장에서 잇따라 탈북자의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음.
- 자전거 대행진 행사단은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까지 6개국 10개 도시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각 도시에서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행사단은 브뤼셀부터 런던까지 총 연장 약 2천400km 중 약 1천km를 자전거로 달렸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현안 협의 재가동(7/18)

-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 파동'으로 한동안 정체됐던 현안 협의에 다시 나서고 있음. 특히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8월 5~6일 방한을 앞두고 양국 외교라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 양국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2009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 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의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방안과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격상,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 한·미, 21일 워싱턴서 방위비 분담 협의(7/18)

- 한·미 양국은 2009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회담을 21일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8일 밝혔다.
- 이번 회담에 한국측은 조병제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측에서는 잭슨 맥도날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함.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제5조(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의 예외협정으로, 2~3년 단위로 새로 체결함. 현재 발효 중인 7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임.

#### ● 오바마 “韓·日·濠·印과 파트너십 강화할 때”(7/16)

-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외교정책 전략을 발표하면서 “안정되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 오바마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더 개방되고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로 발전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놓고 협력할 때라고 대(對)아시아정책을 밝혔다.

#### ● 한·미, 보건증진 정책협력 추진(7/14)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건통계국은 15일 시내 코엑스에서 '건강정책 중장기 국가종합계획 수립 한미 국제회의'를 열고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정보 교류 등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



## 나. 한·중 관계

### ● 중·일 차세대지도자 13명 방한(7/16)

-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된 한·중·일 순회 포럼에 참석중인 3개국의 차세대 지도자 19명이 경유지인 도쿄 방문(7.13~16)을 마치고 16일 최종 행선지인 서울에 도착,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음.
- ‘2030년 동북아시아의 비전’을 주제로 역내 정세 등을 논의하는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방문으로 방한 후 첫 행사를 시작한 뒤 오후 6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환영 만찬에 참석. 이번 행사는 국제교류재단이 한·중·일 소장층 인사들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중국중화전국청년연합회,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 주관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방한에 앞서 중국(7.10~13)과 일본(7.13~16)을 방문했음.

## 다. 한·일 관계

### ● 정부, 日 ‘ARF서 외교회담’ 제안 거절(7/17)

- 정부가 오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갖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거절했음. 외교 소식통은 17일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계획이 없다’고 답신을 보냈다”면서 “한일 양자회담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ARF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임.

### ● 柳외교, 주한日대사 불러 엄중항의(7/1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 항의했음.
- 유 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는, 심히 유감스런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배석한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 유 장관은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해설서에서 독도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음.



### ● 日 해설서 독도 관련 언급 전문(7/14)

-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언급 전문은 다음과 같음.

- 「(중략)..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 ● 日, 한국정부에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7/14)

- 일본 정부는 14일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NHK방송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 열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학생들에게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길 희망함에 따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 라. 미·중 관계

### ● 美 상원의원 7명 中에 ‘탈북자 복송중단’ 서한(7/16)

- 샘 브라운백, 바버라 박서 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탈북자가 복송되면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권고했음.

- 미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UNHCR)과 탈북자를 도우려는 인도주의 기구들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최근 시한이 연장된 북한인권법안에 담긴 내용들임.



## 마. 중·일 관계

### ● 日, 올림픽 때 中日 정상회담 추진(7/20)

-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다음달 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하는 하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기회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중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NHK 방송이 20일 보도.
- 후쿠다 총리는 개막 다음날인 9일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기념식전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베이징(北京)에는 단시간 머물지만 방문 기회를 이용, 정상끼리 만남을 갖는 쪽으로 양국간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 양국 정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두 정상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 ● 中 “다오위다오는 우리 영토”(7/17)

- 중국은 17일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해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자국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오위다오와 부속도서를 놓고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 류 대변인은 “이미 일본 교과서 4종 이상에서 다오위다오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다오위다오가 분쟁 지역이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셈”이라면서 “일본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일단은 화해 무드로 돌아선 중일 관계를 의식한 듯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음.

### ● “中, 일본에 대북 에너지 지원 촉구”<교도>(7/17)

-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일본 자민당 중진인 야마사키 다쿠, 나카타니 겐 의원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계속 대북 에너지 지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며 대북 에너지 지원 동참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바. 기타

### ● 브라질 외무 “DDA 협상 4년 더 미뤄질 수 있다”(7/20)

-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4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19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아모링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각료 회의가 결렬될 경우 DDA 협상의 타결은 최소한 2012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과 미국, EU,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32개국 통상각료들은 파스칼 라미 WTO 총장 주재로 21일 오후 WTO 사무국 내 그린룸에서 각료 회의를 열고 농업 및 NAMA,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 협의에 들어감.

● **북한기가 태극기? 호주 유력지 잘못 보도(7/17)**

- 호주의 동포신문인 한국신문은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17일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기사에서 한국 관련 사실을 다루면서 그래픽에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를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
-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신앙으로 뭉친 도시(A city united by faith)’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청년대회(15~20일, 시드니)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가톨릭 청년들이 시드니를 포함해 호주의 NSW(뉴사우스 웨일스)주 250여개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했음. 신문은 각국의 청년들이 속한 국가의 국기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면서 한국인(Korean)의 경우 캄시와 에핑 인근 지역 두 곳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음. 그러나 두 곳 모두 ‘KOREAN’이란 영문 표기 옆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넣었음.

● 북한연구실 제공